

“차별없는 평등세상 만들어요”

젠더문화축제 성료... 참여형 축제로 더욱 뜻깊어

도내 여성계가 하나되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제8회 젠더문화축제'가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관원기사 5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젠더문화축제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 송성환 도의회의장,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 각급 기관장 및 여성단체장, 도내 대학생, 재직 남성·여성, 유치원생 및 초·중·고 등학생 등 1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평등 세상을 향한 여덟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도내 37개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프로그램을 공동 주관하는 등 여성·남성·대학·기업 관련 단체들의 참여형 축제로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오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구조'라는 주제로 이효진 대표(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특별 강연이 전북대학교 학생 100여명과 함께 했으며,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생 300여명을 초대해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을 상연, 세 살 성평등 교육을 실천했다.

또한 재직 여성들의 슬기 넘치는 이야기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와 젠더극장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2018 청년 여성 영상제작프로젝트 지원작)를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해 미니 영화제를 진행하였으며, 정동성 평등 상식 퀴즈쇼 '젠더벨을 울려라', 여성들의 다양한 젠더문제를 이끌어낸 '젠더 공감 토크'도 오픈 토크쇼로 진행되어 공유하고 공감하는 축제가 되었다.

특히 이번 젠더문화축제에 신설된 '청소년 토크'는 전라중학교 학생 80여명이 정주영 대표(같이교육연수원)

와 함께 '나답게 살아가기'에 대한 주제로 미디어 속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준비한 '낙태죄 합법 불합치,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한 정책포럼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관한 문제들이 슬기롭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밖에도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예비여성창업 CEO 물품 및 7개 시·군 여성친화기업 판매·홍보, 교육수강생 작품 전시·판매전이 부대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포스터 전시회 및 국립여성사 순회전도 함께 열려 어느 해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축제가 성료되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성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인권위원회가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 제대로 누려야”

전북도인권위원회 개최...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

전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전북대교수)는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

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인권위원회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다.

신양균 인권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 전북도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으며, 전북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완주소방서, 소양119지역대 신청사 준공식 열어... “도민과 함께하는 119 되도록”

완주소방서 소양 119지역대 신축 이전 준공식이 23일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국회의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두세훈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마재운 전북소방본부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최등원 완주군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총 사업비 7억7500여 만원이 투입된 이번 신축 이전 공사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이달 마무리됐다. 소양 119지역대는 완주군 소양면 황윤리 부지에 지어졌다.

소방공무원 9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119지역대 신축으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완주소방서는 기대하고 있다.

마재운 전북소방본부장은 "119지역



완주소방서 소양 119지역대 신축 이전 준공식이 23일 열렸다.

대 신축으로 주민의 소방청사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폐쇄적인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119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주력'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지역산업·인재 육성 등 발전정책 추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기여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정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혁신도시의 조성 과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지역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

선, 상생발전, 지역인재 채용 등 다양한 혁신도시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및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전기관 스스로 매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한 '2019년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와 함께 지역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전기관별 지역발전계획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발굴 단계부터 이전기관과 실무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며 "도와 이전기관 간 실무적인 정보교류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기관별 대표사업 발굴을 유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국가예산 부처편성 막바지 집중 활동

전북도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도 주요사업 국가예산에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중심으로 부처편성 막바지 단계에서 총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2020년 국가예산을 오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할 예

정으로, 각 분야의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국가예산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산업부, 농식품부, 문체부, 환경부, 행안부 등 주요 부처 기초실장을 방문하여,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 등

을 설명하고 '20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였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31일까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실국 등이 총력 매진하고,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후에는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강화와 도와 시군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가예산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6월중 개최하는 등 기재부 예산단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해양레저·마리나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정부는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 달성, 3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요트, 서핑, 수중레저 등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전라북도

마리나 등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요트협회, 군산해양지방수산청 및 관계 시·군 합동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군산해수청에서 전라북도 해양레저관광 현황과 활성화 전략, 마리나사업 활성화 기반마련 방안 등을 제시했고, 전북요트협회 김충희 이사는 전라북도 마리나산업 현황

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군산, 김제, 부안 등 연안 3개 시군에서는 마리나항 유치 및 개발계획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해수부에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해수부 및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